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9년12월18일 | 조사역(G3) 김예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인구 108백만 명 (2019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적 외교정책 
GDP 3,568억 달러 (2019 ^f) 	1인당GDP 3,294달러 (2019 ^f) 	통화단위 Peso 	환율(U\$기준) 52.66 (2018) 

- 필리핀은 태평양상의 타이완과 보르네오 섬 사이에 위치한 도서국가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필리핀 경제는 해외 근로자 송금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주도로 지난 5년간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2019년 정부예산 승인 지연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활발한 민간소비와 정부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6%대 성장을 회복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8년 5.2%에서 2019년 2.5%로 둔화됨.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5월 선거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여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포괄적 조세개혁, 제조업 수출 진흥, 마약과의 전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은 해외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만연한 부패, 이슬람 세력에 의한 치안 불안 등의 문제를 겪는 가운데 풍부한 광물 자원과 영어 구사 노동가능인구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
- 친미반중으로 요약되는 기존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영유권 갈등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석유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 ('69, 개정 '94, '09, '16), 문화협정 ('73), 무역협정 ('78), 경제·기술협력협정 ('85), 이종과세방지협약 ('86), 과학·기술협력협정 ('86), 군수·방산협력협정 ('94, 개정 '19), 범죄인인도조약 ('96), 투자보장협정 ('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협정 ('03), 무상원조협정 ('14),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10월	주요품목
수 출	10,593,713	12,037,254	7,060,525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등
수 입	3,702,312	3,569,396	3,110,808	반도체, 곡실류, 산업용 전자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720건, 4,389,825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6.1	6.9	6.7	6.2	5.7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3	2.9	5.2	2.5
재정수지/GDP	0.6	-0.4	-0.4	-1.6	-1.1

자료: IMF 및 EIU.

2019년 경제성장률은 예산 승인 지연의 여파로 6%에 미달할 전망

- 필리핀 경제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 발전을 토대로 한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10년 간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2018년에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의 영향으로 6.2%의 경제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19년에는 의회의 정부예산 승인 지연으로 정부지출이 지연되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17분기 중 최저 수준인 5.5%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3분기 말 경제성장률은 6.2%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예산 승인 지연의 여파로 2019년 전체로는 5.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연된 예산의 집행 및 각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2020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견고한 경제기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 6.2('20) → 6.4('21) → 6.5('22) → 6.5('23) → 6.5('24)

- 2019년 정부 지출 둔화에도 해외 근로자 송금 및 BPO 산업을 통한 민간소득 및 소비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어, 가계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가계지출 및 정부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단위 : %

	2018. 4분기	2019. 1분기	2019. 2분기	2019년 ^f	2020년 ^f
가계지출	5.3	6.1	5.6	5.9	5.9
정부지출	12.6	7.4	6.9	8.0	10.0

자료: 필리핀 통계청.

세계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국제가격이 낮았던 2015년 0.7%를 기록한 후 소비세 인상, 국제유가 상승, 폐소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된 결과 2018년 5.2%까지 상승하여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 범위(2~4%) 상한을 초과함.
- 2019년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폐소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 식료품 가격 및 교통 요금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범위 내로 진입(2019년 평균 2.5% 수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
- 두테르테 행정부는 소비자물가 산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쌀 공급 확대를 도모코자 금년 3월 쌀 관세법(Rice Tariffication Law)을 발효시켰음. 동 법안은 쌀 수입량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쌀 경쟁력 강화기금(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을 조성하여 쌀 저장고 및 관개시설 구축,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완만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증가세

- 2019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는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입법 중인 포괄적 조세개혁(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RAIN)에 따른 세수 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 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재정수지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전망 >

단위 : 백만 페소, %

	2020	2021	2022	2023 ^f	2024 ^f
재정수지	-349,025	-412,299	-484,298	-533,566	-630,378
재정수지/GDP	-1.7	-1.8	-2.0	-2.0	-2.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9년 중 기준금리를 3회에 걸쳐 총 75bp 인하(2019.12.4. 현재 4.9%) 하였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있어 경기 과열을 초래하거나 또는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7,266	-1,199	-2,143	-8,729	-4,646
경상수지/GDP	2.5	-0.4	-0.7	-2.6	-1.3
상 품 수 지	-23,309	-35,549	-40,215	-50,973	-49,435
상 품 수 출	43,197	42,734	51,814	51,985	51,757
상 품 수 입	66,506	78,283	92,029	102,958	101,192
외 환 보 유 액	72,352	71,853	71,598	69,382	75,669
총 외 채	80,548	74,763	73,098	86,100	86,300
총외채잔액/GDP	27.5	24.5	23.3	26.0	24.2
D.S.R.	6.9	8.6	7.3	8.0	7.8

자료: IMF, EIU

2016년 이후 원자재,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제 비중이 낮은 제조업*, 원자재 및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아웃소싱 산업(BPO)과 관광업에 따른 서비스수지, 해외 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음.

* 경제 부문별 GDP 비중 : 농업 8.8%, 산업(제조업 포함) 31.0%, 서비스업 60.2% (출처: EIU)

- 필리핀의 2017년 상품수출은 전자·전기제품(수출 전년대비 11% 증가) 및 금(126% 증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총 21% 증가하였으며, 이후 상품수출 증가율은 2018년 0.3% 및 2019년 -0.4%로 둔화됨.
- 2016년 이후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8년 -87억 달러(GDP의 -2.6%)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에는 해외 근로자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지 및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로 -46억 달러(GDP의 -1.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상반기 기준 해외 근로자 송금액은 2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는 33억 달러로 49.2% 증가함.
- IMF는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4년 106억 달러(GDP의 -1.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외적 영향으로 폐소화 가치 하락 추세

- 2019년 중 폐소화 가치 등락으로 인한 화폐가치 변동성 증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투자심리 저하,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기침체 및 미·중 간의 무역 긴장 장기화는 향후 폐소화 가치에 추가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폐소화의 대미달러 연평균 환율 추이 : 45.50('15) → 47.49('16) → 50.40('17) → 52.66('18) → 51.80('19^e)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18년에는 폐소화 가치 하락에 의한 자본 유출과 폐소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69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는 외환보유액이 757억 달러로 증가하여 월평균수입액의 6.7개월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과 2021년에도 외환보유액*은 점차 증가해 월평균수입액의 6개월분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전망(백만 달러) : 77,575('20) → 79,324('21) → 81,536('22) → 84,777('23) → 85,237('24)

(출처: EIU)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GDP 증가에 힘입어 2017년 23.3%까지 하락한 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8년 26.0%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24.2%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원리금상환액과 총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2019년 7.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82.9%,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22.1%, 총외채잔액 중 중장기외채 비중은 약 80.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 전망(백만 달러) : 86,500('20) → 86,700('21)

외채원리금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 8,073('20) → 8,073('21)

(출처: OECD CRAM)

구조적취약성

공무원 부패, 행정 비효율, 정부의 사업 개입 등의 문제 지속

- 두테르테 행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며,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처리와 열악한 공공 전산시스템은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임.
- 세계은행 기업경영여건 보고서에서는 신용 획득 및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의 개선으로 2018년 190개국 중 124위에서 2019년 95위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는 141개국 중 2018년 56위에서 2019년 64위로 순위가 하락함.
- 또한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주요 산업에 여전히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현행 40%)이 존재하며, 최근 광산, 카지노 등의 사업에서 정부가 운영에 불시 개입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최근 사례로는 공산당 반군 연관 의혹 광산 사업 중단 위협(2017.11월), 보라카이 관광 중단(2018.4월), 마닐라 카지노 사업 계약 해지(2018.8월), 마닐라 베이 관광 중단(2019.1월) 등이 있음.

해외 송금액과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해외 근로자 수는 약 230만 명(생산가능인구의 5% 수준)이며, 2019년 기준 해외 근로자 송금액 추정 규모는 344억 달러로 GDP의 약 10%에 달하는 등 해외 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해외 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액 유지와 국내소비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송금액이 장기적 자본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총수출의 약 51%)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성장잠재력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잠재력 보유

- 필리핀은 광물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총매장량 가치 8,400억 달러 추정)이나, 정부의 환경보호 우선정책과 불안정한 사업개발 여건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1억 명 이상의 인구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풍부한 노동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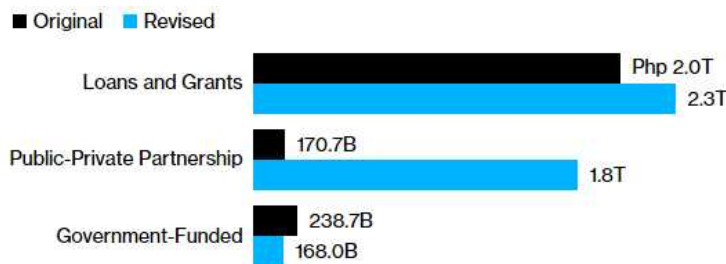
- 필리핀은 1억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 비해 젊고 (전체 인구의 연령 중간값 23세) 영어구사가 가능한 노동인구와 원만한 노사관계 문화를 보유함.

정책성과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계획 달성 미진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취임 당시 1,8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지출을 2022년까지 GDP의 7%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75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국가경제개발청(NEDA)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75개 중 35개의 사업을 승인하였음.
- 그러나 주요 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2개에 불과하며, 9개의 사업만 공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 추진절차의 지연과 토지 취득 문제로 당초 계획 달성이 미진함에 따라 정부는 프로그램 수정안을 마련 중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요 사업 수정안은 당초 75개보다 많지만 규모는 작은 100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까지 54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PPP 사업 비중을 늘리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져 수정안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주요 사업 수정 전·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추정) >



출처: Bloomberg

포괄적 조세개혁의 입법 및 시행 지연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5월 대선 직후 빈곤 퇴치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의 추진을 공언하였으며, 조세수입 증대 및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포괄적 세제개혁(TRAIN)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빈곤을 축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세제 개혁안을 단계별로 입법 중임.

< 필리핀 정부의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

구분	내용
Package 1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유류세·자동차세 조정 등
Package 2	법인세율 인하(30%→20%), 기존 보조금 삭감, 조세 공정성·투명성 강화
Package 2+	죄악세 및 채굴세 제도 개선
Package 3	통합된 부동산 가치 측정 시스템 도입, 부동산세 인상 및 신설
Package 4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선

- 2018년 1월 시행된 Package 1은 개인소득세 감세(연봉 25만 페소 이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유류세 증세 및 신설(디젤, LPG에 세금 도입), 설탕세 신설, 자동차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음.
- 주변국보다 높은 법인세율*(30%)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실제 경영 성과를 내는 기업 및 전략적 산업에 보조금을 집중시키며 대기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Package 2는 현재 필리핀 의회에 계류 중임. Package 3는 2016년 7월 이후 상원 검토 중이며, Package 4는 하원 검토 지연으로 상원에 부의되지 않아 당초 필리핀 정부가 목표했던 연내 입법 및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싱가포르 17%, 태국 20%, 베트남 22%, 말레이시아 24%, 인도네시아 25%

2015~17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및 제조업 다변화 정책 추진

- 수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2015~17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추진 결과, 필리핀의 2017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 목표치(7.7~10.6%)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6월 확정된 2018~22 PEDP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수출규모를 1,220~1,308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자 함.
 - 2015년 대통령이 승인한 포괄적 자동차 산업 부활전략(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은 역내 주요 자동차 부품 생산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정 생산·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 앞 6년 간 매년 평균 45억 페소(약 87백만 달러) 규모의 조세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함.
- 동 프로그램에는 일본계 자동차 회사가 참여하였으며, 6년 간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됨.

정치동향

두테르테 정권, 2019년 5월 총선 승리로 정책 추진력 확보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말 취임 직후 91%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 2016년 대선 당시 두테르테 후보는 마약과의 전쟁, 연방제 시행, 내전 종결, 3자녀 제한 정책, 부패 척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동 공약은 정치권 부패와 마약 범죄의 근절, 경제 회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맞물려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에 크게 이바지함.
- 2019년 5월 총선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 의석의 대부분 차지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22년 5월까지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선거는 하원의원 전원(292석)과 상원의원의 절반(24석 중 12석)을 선출하였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 하원 200석 이상 및 상원 9석을 차지하였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키노 前대통령이 속했던 자유당(Liberal Party), 기독교인무슬림민주당(Lakas-CMD), 민족주의인민연맹(National People's Coalition), 민족통합당(National Unity Party) 등을 포함한 주요 정당을 본인의 필리핀민주당(PDP-Laban Party) 연합체로 회유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한 바 있음.
- 동 선거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여,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여론도 있어 향후 재집권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임.

미미한 개혁 성과와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불만 대내외 여론 존재

- 2018년 중 인플레이션 압박, 미미한 개혁 성과,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였음. 아울러 필리핀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인 소수 재벌과 토착 세력의 경제권 지배, 가문·족벌 정치 중심의 정치 상황이 시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떠오름.
 - 필리핀 정부는 2016년 6월 이후 1년 간 마약 거래가 약 26% 감소하고 주요 범죄가 29%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가혹한 형벌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 증가, 범죄 소탕 과정에서의 재판 없는 처형 용인, 수용 능력을 초과한 교도소 내 수감자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이어졌음.
- 한편,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 Social Weather Survey에 따르면, 물가상승 압박과 포괄적 조세개혁에 따른 세금 부과에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9년 3분기 말 기준 필리핀 국민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사회동향

마약과의 전쟁으로 연방주의 도입 보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의 반정부 이슬람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설립하고 조세 등 재정 자치권을 부여하되 외교·국방 등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방식의 연방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10월 마약 단속력 약화 우려로 연방주의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힘.

높은 강력범죄 발생률, 이슬람 세력 및 공산당 반군의 테러 발생으로 치안 불안정

- 필리핀은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높으며,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과 공산당 반군에 의한 소규모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정함.

국제관계

실리적인 외교노선 추진 중

- 필리핀은 친미반중으로 요약되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갈등과는 별개로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실리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
 - 2016년 7월 유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위 판결을 "옆으로 치워두겠다"(set aside)고 밝힌 뒤 2019년 10월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석유 공동개발*을 위한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언론 매체 등에 따르면 필리핀이 개발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짐.
 - * 2018년 11월 중국과 남중국해 석유 공동 개발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
 - 또한, 지난 11월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포럼에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두 나라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미국은 1898년 이후 약 50년간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1946년 독립 이후에도 70년 가까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짐.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필리핀은 1984년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재무재조정을 받는 등 외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19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잔액은 단기 17.1억 달러, 중장기 12.8억 달러로 총 29.9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액은 50만 달러로 미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19.06)	3등급(2019.06)
Moody's	Baa2(2018.07)	Baa2(2017.06)
Fitch	BBB(2019.05)	BBB(2018.12)

투자적격 신용등급 평가 유지

- 국제신용평가 3사는 높은 경제성장, 낮은 외채, 정부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필리핀에 대해 현재까지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필리핀 경제는 정부의 지연된 예산 및 정책 집행 의지와 투자심리 회복, 견고한 가계소득에 기반한 민간소비로 상반기의 성장 둔화를 회복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전기 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계 반도체 시장상황 악화로 2019년 상품수출 증가세가 둔화됨.
-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2019년 월평균수입액 6.7개월분 상당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외채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 필리핀은 세계적인 해외 근로자 송출국으로, 젊고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BPO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개발된 광물자원이 풍부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음.
- 두테르테 정권은 마약과의 범죄, 실리적 친중 노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선거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자, 조세 개혁, 제조업 기반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 현안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함.
- 이상을 고려하여,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과 같은 C1으로 정하고자 함.